

# ‘특검법 이탈표’ 노리는 민주... 재의결에 화력 집중

박찬대 “부결되면 한동훈 토사구팽” 국힘 집단 기권표 검토 보도에 발끈 여당 분열에 8표 이상 이탈표 노려 韓 “민주당에 영향 받지 않아” 일축

여야가 오는 12월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화력을 집중하며 대어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몰락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압도적 민심을 거역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만큼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필연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토사구팽이라고 했다. 만약 이번에도 김건희·윤석열 부부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면 국민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동일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한 대표를 정조준했다. 특검법 재의결 시 여당 의원들이 본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스

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집단 기권표’를 던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 명패와 빈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집단 기권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사실상 공개투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원을 ‘입틀막’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할 생각 말고 국민 뜻에 따라 찬성 표결하길 바란다”며 “김건희를 특검하란 국민 명령을 외면하면 국민의힘은 윤 정권과 몰락할 일만 남는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러저리 눈치 보며 주판알 뱅기는 여당 의원들에게 충고한다. 김건희 특검 수용과 윤건희(윤석열

·김건희) 난파선 탈출만이 국민의힘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당내 이탈표 심리를 자극했다.

당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당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로 미뤘다.

국민의힘이 ‘당원계시판’ 대통령 비방글 논란으로 친한계와 친윤계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당내 분열을 노려 재표결시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내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특검법은 법률로서 확정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친한계 의원들도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탈표가 늘어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여권을 강하게 몰아붙이기 위해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특검법과 함께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상설 특검도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은 상설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년 초 쏘 상설 특검을 가동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민주 광주시당 “이재명 무죄 선고, 국민 상식의 승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맞선 국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광주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선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검찰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22년 전 종결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무리한 기소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

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상식의 승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한 정치검찰의 무도하고 부정한 법 테러를 법원이 제지하는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은 어디갔나.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탄압으로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 정준호 ‘재개발 정비사업 과잉경쟁 방지법’ 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사진)은 27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 과잉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 홍보수단 외에 건설사의 음성적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조합원의 집단지성을 위해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

았다. 정 의원은 “금품, 향응 등 각종 불법행위는 도심정비 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신속한 재개발을 방해해 조합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며 “각종 불법행위를 제한하고 이성적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박미정 시의원 “내년부터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내년부터 광주어린이·청소년들이 대중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박미정(사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미정 의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이동은 교육권에 해당하므로 광주시 교육감도 사회적 책임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에 할인을 더해 ‘광주 G-패스’ 사업을 내년 1월 시행한다. 지난 7일 광주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의장인 이정선 교육감은 61억원 중 2025년 25%에서 2030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필순·조석호·임미란·정다는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성현 기자

## 여야, 쟁점 예산 처리 지지부진... ‘깜깜이 심사’ 우려

### 민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 국힘 “일방 삭감 안돼”...대치 이어져

여야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쟁점 예산 처리가 지지부진해 전례 없는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정부 부처 예산에 대해 감액심사를 벌여왔는데 주요 사업 예산안을 두고 줄줄이 판단을 보류했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심사했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특별비 예산 복원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면서 관련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이 2조8000억원의 감액을 요구

한 정부 예비비(4조8000억원)도 관련 심사가 보류됐다. 또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와 원전 관련 예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등도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삭감 규모 등을 놓고 힘겨루기 중이다.

여야는 전날부터 28일까지 증액 심사에 돌입하지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를 비롯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어 증액안 역시 심사가 줄줄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소위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예산은 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소소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논의 창구로,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첨예

해 대부분의 예산은 결국 양당 원내 지도부가 들어와 협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경 등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는 삭감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야당의 감액안이라도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현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만큼, 감액 권한만이라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합의를 못 해 예결위 소소위로 넘긴 보류 항목이 예년보다 많아 전례 없는 ‘깜깜이 밀실 심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野 주도 처리

### 내달 11일 개최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월11일 강박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수석 열세에 밀렸다.

강박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두 검사와 함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김·박 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먼저 연 뒤 이날 두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박신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회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삼인성호라는 말을 만들 정도의 조작수사를 했던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입증은 없이 정정만 했다”며 “탄핵을 하려면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에 부합하는 증인들만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탄핵소추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